

월간 주요 이슈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4. 11. 20.)

해외직구 가전 및 아동용품 등에서 위해 사례 많아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

- 알리익스프레스·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총 1,915건 유통차단 -

-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, 이하 '소비자원')과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'공정위')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현황을 분석한 결과, '가전·전자기기', '아동·유아용품'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.
-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.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『자율 제품안전협약』을 체결하였으며, 이에 따라 ❶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❷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으며, 정부 등이 10.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,915건*이다.
 - * ❶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, ❷ 해외리콜 제품 관련 1,167건
-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, '가전·전자·통신기기'가 631건(33.0%)으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'아동·유아용품' 588건(30.7%), '액세서리류' 293건(15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'가전·전자·통신기기(631건)'의 경우, 유해물질함유(납·카드뮴 등)가 359건(56.9%)으로 가장 많았고, 감전 위험 등이 132건(20.9%), 폭발·과열·발화 등이 84건(13.3%)으로 뒤를 이었다.
- '아동·유아용품(588건)'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(47.8%)으로 가장 많았고,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(40.5%)을 차지했으며, '액세서리류'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됐다.
-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, 특히, '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'에 참여하는 정부부처(기관)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.
-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,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.
-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·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,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.